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 위원회의에서 한덕수(왼쪽 오른쪽에서 세번째)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전남도 제공>

## 목포·신안·무안 신성장거점 육성

### 2020년까지 24조6천억 투자...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 정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최종 확정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정부계획으로 최종 확정돼 전남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전남 서남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2020년까지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을 환황해시대의 신성장거점 및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총리실에서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정부 재정 5천억원과 민자 9조3천억원 등 9조8천억원을 지역발전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도로·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14조8천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총 24조6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낙후지역인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06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마련한 뒤 국무조정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어왔다. 이날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은 전남 서남권을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서남권 크루즈 관광을 추진하는 등 자연친화적 해양 생태체험 및 휴양관광지를 육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태양광·조류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남안 신도시의 선시 시범단지 개발, 중소조선소

특화 발전과 수출 농수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항의 물류거점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발전계획을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9조3천억원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소요될 14조8천억원의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특별재난지역 지정 내주 결정"

### 강무현 해수부장관, 신안 타르피해 현장 방문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10일 "타르 피해가 심각한 신안, 무안, 영광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문제가 다음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강 장관은 이날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신안군청,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타르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갯벌과 해안선, 다도해 국립공원 등 우수한 해양자원과 수

산 양식시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다음 주 내에 결정될 것이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전남도청 등의 방문에

이어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를 찾아 김 양식장 피해 현장을 살펴본 뒤 가진 어업인들과 간담회에서는 "어민들의 생업에 어려움을 준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이날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 해양 정책의 일원화가 어렵게 되고 2012년 여수엑스포의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리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전남 해역에 타르의 추가 유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타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BBK 특검' 예정대로 수사한다

### 현재, 동행명령제 조항만 위헌 결정 15일 착수... 알맹이 없는 수사 될수도

BBK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BBK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로 특한 동행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신체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이유를 밝혔다. 선고 순간부터 특검법 중 동행명령제를 규정한 6조 6항·7항과 동행명령 거부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한 18조2항은 효력을 잃었다. 특검법 6조 6항·7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 위헌, 1명 합헌, 1명은



각하의견을 내놓았고, 18조2항에 대해서는 8명이 위헌, 1명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현재는 수사대상에 관한 특검법 2조에 대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고, 차별이 합리적 이면 헌법상 허용하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국회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수사대상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취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토록

한 특검법 2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적절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특검 도입은 입법부가 결정, 임명권한은 헌법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또 재판기간을 1심은 3개월, 2심·3심은 각각 2개월로 규정한 특검법 10조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일 뿐, 적절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져부심청은 자동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은 오는 15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착수한다.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선고됨에 따라 기존의 검찰수사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어 사실상 '알맹이' 없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신당 대표 손학규 선출

### 이해찬 전 총리 전격 탈당

#### 리더십 확보 과제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새 대표로 선출했다. <관련기사 5면> 후보 등록 없이 중앙위원들이 1명씩 선호후보를 적어내는 '교황 선출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손 전 지사는 재적위원의 과반을 득표, 대표로 선출됐다.



<손학규 대표>

그러나 손 전 지사의 대표 선출 직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탈당하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한나라당을 탈당, 신당 창당에 합류한 손 전 지사는 민주·개혁진영에서 18대 총선을 지휘하게 됐다.

등 당내 일각에서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리더십 확보 문제가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당내 계파의 반발을 잠재우고 공천 혁명을 이루는 일은 손학규 체제의 최대 난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이해찬 전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가 대통합민주신당을 떠나는 이유는 손학규 전 지사가 대표가 됐기 때문 아니고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향이 결코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 062-220-0541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www.kyxiofarm.co.kr 080-022-2200